

# 무이자할부 · 캐시백 등 축소... '카드알뜰족' 피해 불가피

[카드수수료 파장]

금융당국, 카드사는 혜택 줄이고 소비자는 연회비 지불해야  
당국, 포인트 · 할인서비스 일시 감축 아냐...단계적으로 축소  
카드업계, 무이자할부 · 포인트적립 · 캐시백 혜택부터 축소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나 포인트적립, 캐시백 등 혜택이 사라진다. 카드혜택은 소비자가 이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는 구조로 점차 개편된다.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적은 연회비로 알뜰하게 소비하던 카드알뜰족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제공했던 카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도 지시했다.

카드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리던 카드혜택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마케팅비용 축소를 실행하면 최소한 일회성 마케팅비용은 모두 줄여야 할 판"이라며 "다른 카드혜택도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일회성 혜택은 무이자 할부다. 기존에 카드사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기간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마다 적립되는 포인트 혜택,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등 서비스도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혜택이 탑재된 카드도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금융당국은 여러 부가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 한 카드에 탑재하지 말고 이를

카드수수료율 인하 개편안 단위: %

가맹점 구분	우대가맹점 확대					일반가맹점(평균수수료율)	
	연 매출 (원)	~3억	3~5억	5~10억	10~30억	30~100억	100~500억
신용	현행	0.8	1.3	2.05	2.21	2.20	2.17
	개선안	0.8	1.3	1.4	1.6	평균 1.9	평균 1.95
	평균 인하폭			0.65%p	0.61%p	평균 0.3%p	평균 0.22%p
체크	현행	0.5	1.0	1.56	1.58	1.6	
	개선안	0.5	1.0	1.1	1.3	평균 1.45	
	평균 인하폭			0.46%p	0.28%p	평균 0.15%p	

자료: 금융위원회

간소화 할 것을 지시했다.

단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를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운영방안은 내년 1월까지 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를 알뜰하게 찾아 이용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우대에서는 역행한 카드수수료 지침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격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연매출 기준 500억원 이하 가맹점도 포함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과연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가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 간 회원모집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반 소비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가 과도하게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을 들었다.

이어 "이런 서비스로 얻는 소비자 실익은 많지 않은데 이에 대한 부담은 가맹점이 지고 있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대신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가 직접 연회비를 더 지불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를 한번에 모두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포인트나 할인서비스를 일시에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도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단계적이라지만 일회성 혜택을 시작으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혜택은 사라질 것"이라며 "반년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알뜰족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혜택을 이용하며 소비하던 알뜰족 소비가 줄어들면서 카드업계는 물론 가맹점까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최저임금 폭탄돌리기'...갈등 양산한 정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중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서영교, 남인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중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이원욱, 홍의락, 강훈식 의원.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카드사들은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드노조까지 고용불안을 이유로 반대부정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소비자

## 카드사 반발에 카드노조까지 고용불안 이유로 반대 소비자 혜택 축소돼 내수 경기 부정적 영향 지적도

카드혜택이 축소돼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폭탄돌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기준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여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과도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30~5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

의 근저에는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자영업자 통계는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줄어든 점을 들어 정책의 영향보다는 산업 구조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명했다. 10월 들어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자영업자들이 환영하고 나서

면서 비교적 어려움이 가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카드업계와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폭탄' 마냥 돌리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카드노조와 상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사흘 전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들이 나름의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한 셈이다. 하지만 차등수수료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도 업계 반발이 거세자 방안 발표 다음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사노위라는 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셔서 노사 간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얘기해서 국회에 넘겼다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